

세계지방자치동향



지방행정

- (한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방안
- (일본)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수요와 SDGs
 - 도쿄 에도가와구(江戸川区) SDGs추진 센터를 사례로 -
- (독일) 베를린 월세상한제의 폐지 과정과 시사점

지역개발

-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클린 스트리트 시스템(CleanStat)”
 - 스마트한 도시 위생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수집 및 개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의 의의

- 문재인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위하여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기준 인건비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옴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가 주민 복리 증진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행정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현행제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통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국가공무원 임명(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 및 대통령령의 관여(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대통령령에 의한 권한대행 순서의 지정(지방자치법 제111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배치(지방자치법 제112조 제5항 및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의 관여(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등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제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에 대한 제약을 들 수 있음
 -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기구 정원규정 제9조)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기구정원규정 제9조),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기구정원규정 제10조)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을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현장인력 확충이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는 핵심 성과지표를 도입하고 성과협약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인력충원 관련 주민의 삶과 직결된 3대 분야 10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역점사업 전담 인력을 기준인력으로 신청 시 자율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핵심성과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적용지표가 상이함(아래 표 참고)
- 핵심성과지표 관련 우수사례 및 지역현안 전담인력 성과협약에 따른 평가결과를 1:1 비율로 반영하여 기관포상, 차년도 인건비 산정 시 지역현안인력 추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표 1 | 지자체 조직관리 핵심성과지표

구분	핵심성과지표	협조부처
시도	1. (소방) 골든타임(7분) 내 소방차량 현장도착률	소방청
	2. (소방) 화재 인명피해 감소율	소방청
	3. (소방) 화재발생 감소율	소방청
	4. (생활안전) 감염병 원인 규명률	복지부(질본)
	5. (생활안전) 구제역 항체 양성률	농림부
시군구	6. (사회복지) 찾아가는 복지상담 비율	복지부
	7. (사회복지) 위기가구 사례관리 실적	복지부
	8. (사회복지)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	복지부
	9. (생활안전) 재난피해 감소율	행안부(안전)
	10. (생활안전) 재난상황보고훈련 목표달성률	행안부(안전)

- 또한 성과기반 시·도 자율신설기구 설치·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기구 존속 및 폐지 또는 상시기구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 단체장 역점사업 시행 등을 위해 실·국·본부수 상한 20% 범위 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하되, 2년 범위 내 존속기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상시기구 전환 여부 결정
- 자체평가를 하되, 객관성·전문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¹⁾
- 성과지표²⁾ 달성여부,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1)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기구정원규정 제29조에 따라 설치가능한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성과지표는 기구산설 시 설정하며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로 구성하되 산출·결과지표 중심으로 평가시행

결과를 공유하여 모범사례는 전파하고, 부진사례는 컨설팅을 실시

- 이 밖에도 조직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지방조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정원관리와의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연계사무, 국가현안, 요청 분야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신규충원과 인력 배치를 실시하는 수시진단제도를 추진 중
 - 자치단체의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원의 1~3%를 재배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준인력 증원 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
 - 위원회의 기능 검토 후 통폐합,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 기구설치와 직급기준은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의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방안 모색

- 최근 행안부 지침에 의해 도입하고 있는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지자체 조직관리 방안은 여전히 주로 정부 간 통제 방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주민에 의한 통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지표 및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자발적 행정통제
 - 기존 5대 지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표 및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자정 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통제에 의한 관리감독 시스템에서 행정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의 선순환에 의한 정보환류시스템으로 전환
- 중앙부처의 국민참여 조직진단제도 지역 적용 가능성 타진
 - 현재 20개 부처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지역단위로 확산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에 참여하며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마련
 - 지역주민 기반 평가지표는 타지역과의 횡단적 비교분석이 아니라, 지역 내의 종단적 분석을 통하여 지역정보를 축적하고, 지역 간 조직진단 사례의 공개와 교류를 통하여 조직진단평가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자원으로 예상됨

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연구위원)

새로운 행정 서비스의 수요와 SDGs - 도쿄 에도가와구(江戸川区) SDGs추진 센터를 사례로 -

개요

- 도쿄 에도가와구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DGs추진 센터를 설립
- 글로벌 캠페인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 팬데믹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실천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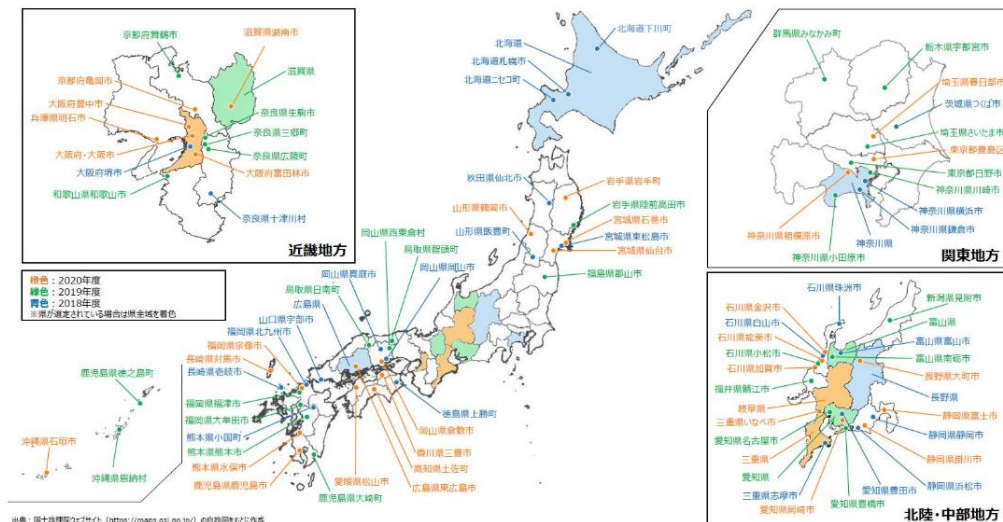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01년에 책정된 새천년 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으로 2015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 포함된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국제적 목표임
- 17개의 목표, 169의 타깃으로 구성되어 지구상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약속함



| 그림 1 | SDGs 17개 국제목표

- 「SDGs 액션 플랜 2021」에서 SDGs를 원동력으로 한 지방 창생,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창출을 중점사항으로 선정함
- SDGs 미래 도시, 지역 창생 SDGs 민관 협력 플랫폼, 지방 창생 SDGs 금융 등을 통해, SDGs를 원동력으로 한 지방 창생을 추구함
- 개개인의 가능성 발휘와 연대 강화를 통해 액션 플랜의 가속을 추구함
- 성평등, 바리아프리, 어린이 빈곤대책, 교육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함
- 지자체 SDGs의 달성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우수한 사업을 제안한 도시를 “SDGs 미래 도시”로 선정하여 지자체 SDGs 추진 관계 부처 TF가 지원함
- 선도적인 사업을 실시한 도시를 “지자체 SDGs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자금 지원
- 성공 사례의 보급 및 확대를 통해, 지자체의 SDGs 달성을 위한 사업 확대를 지향함
- SDGs 달성은 2024년까지 도도부현 및 기초지자체의 60%를 목표로 함



범례 ● 2020년, ● 2019년, ● 2018년

| 그림 2 | 지자체별 SDGs 현황도

우리 마을 SDGs 가이드라인과 목표 달성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

- SDGs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행위자의 빈곤, 기아, 건강 등의 박멸과 개선을 도모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의 기본적 역할로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의 행정을 자주적이며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SDG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경주해야 함

- 지자체가 SDGs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이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음. 목표 달성에 있어 분야 횡단적이며 포괄적 사업 추진이 필수 불가결임. 이를 위해서는 행정, 시민, 시민단체, 민간기업, 대학 등 다수의 관계자에 의한 협조와 포괄적 사업 추진이 요구. 일반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관계자가 협동할 때 장애가 발생하나 지자체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순조롭게 진행됨
- 지자체가 SDGs 목표 달성을 추진할 때의 이점
 - 전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자체 특유의 역사에 입각한 독자적 마을 만들기
 -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 글로벌 파트너십의 추진
 - SDGs 목표 달성의 추진에 의한 자율적 선순환 구조의 창출
- 다양한 거버넌스 단위(글로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협동하는 수직적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 사업 목표별로 설치된 조직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성이 있는 타조직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교환, 인적 교류를 통한 수평적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도쿄 에도가와구(江戸川区) SDGs추진 센터의 설립

- 에도가와구는 SDG의 추진을 통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2021년 4월 1일부터 SDGs 추진부를 설치함. 지역주민과 구내사업자에게 SDGs에 관한 정보발신의 거점으로서 「SDGs 추진 센터」를 개설함



| 그림 3 | SDGs 추진 센터 전경



| 그림 4 | 인터뷰중인 사이트 구청장

- DGs 추진부의 업무내용

| 표 1 | SDGs 추진부의 조직 및 업무 내용

과명	주요 담당업무
SDGs 추진과	SDGs의 보급 계몽, SDGs의 미래도시계획, SDGs 추진본부 운영
공생사회 추진과	공생사회 추진 기획 및 조정
홍보과	구행정에 관한 정보 제공, 구청장과의 소통, 홍보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에도가와구의 매력 창조·발신의 조정

- 담당 부서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구청 조직을 횡단하는 체제로서 「에도가와구 SDGs 추진 본부 (본부장: 사이토 구청장)」를 설치할 예정임. 또한 내각부가 선정하는 「SDGs 미래도시」에 응모, 「(가칭)에도가와구 공생사회 = SDGs 비전」을 책정 할 예정임

시사점

- 글로벌 동향과 환경문제를 중요시한 MDGs보다 다양한 이슈에 적용이 가능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창생 사업에 도전함으로써 코로나 상황의 타파를 도모함
- 기존의 복리후생의 획일적인 이슈에서 벗어나 SDGs의 개념을 통해 LGBTQ+, 생리 빈곤, 영케어러, 실직자, 커리어 단절 여성, 싱글맘,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됨
- 필자의 인터뷰 및 관찰에 따르면 SDGs의 개념을 통해 기존의 지자체가 제공했던 행정 서비스로 인한 갈등관리 도구로서의 유효성이 발견되었음

자료출처

- 지자체 SDGs가이드라인 검토위원회(2018) 『우리 마을 SDGs 가이드라인』 건축환경·그린 에너지 기구.
- 에도가와구청 <https://www.city.edogawa.tokyo.jp/>
-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about/index.html>
-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sdgs/pdf/sdgs_gaiyou_202103.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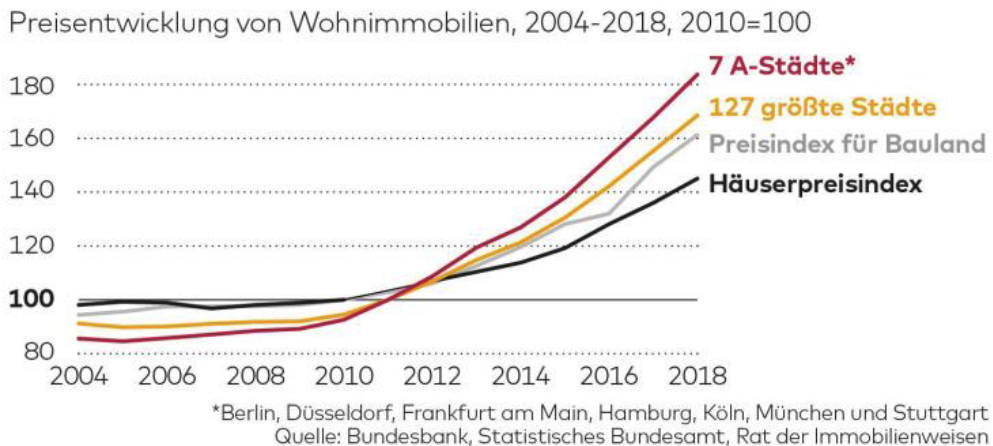
배 윤 통신원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

베를린 월세상한제의 폐지 과정과 시사점

개요

-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주요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유럽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자본의 쏠림현상 가속화와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 해외자본의 유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 독일연방은행, 연방통계청, 독일 부동산협의회

| 그림 1 | 독일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 추이(2004-2018), 2010년 기준지수 = 100

-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 그림과 같이 독일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시각화하여 살펴보면 7개 대도시(7 A-Städte, 베를린,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쾰른, 뮌헨, 슈투트가르트)에서 그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27개 대도시(127 größte Städte)로 확대해도 독일 전역의 부동산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독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정부에서 표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 원고에서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베를린에서 시행되었던 주거용 월세상한법의 탄생과정과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연방정부의 노력과 베를린시 별도의 월세상한제 시행

- 독일 연방정부는 급등하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해왔음. 2013년 용도변경금지법(Zweckentfremdungsverbot)을 통해 Airbnb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90일 이상 임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2015년 임대료제동책¹⁾(Mietpreisbremse)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음
- 이에 베를린시의 사민당(SPD), 좌파당(Die Linke), 녹색당(Grüne)의 적적녹 연정은 '20년 2월 도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임대료제동책에 더하여 월세상한제(MietenWoG)를 도입²⁾하여 시행하였음
- 여타 독일의 대도시나 유럽의 다른 주요 도시보다 베를린은 임대료가 저렴한 편에 속했으나 '0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매매는 3배 가까이, 임대료 또한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별도의 제동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법을 시행하였음
- 베를린의 월세상한제는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법안 초안 발표일('19년 6월)을 기준으로 5년간 주택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2022년부터는 물가상승률 분 정도의 상승률만 허용하여 베를린 거주자 약 85%가 적용받는 법이었음
- 상한제 시행 이후 '20년 3월부터 베를린 지역의 월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독일 공영방송 ARD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71%가 베를린의 임대료 상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 등 정책의 효과와 국민적 동의를 동시에 얻은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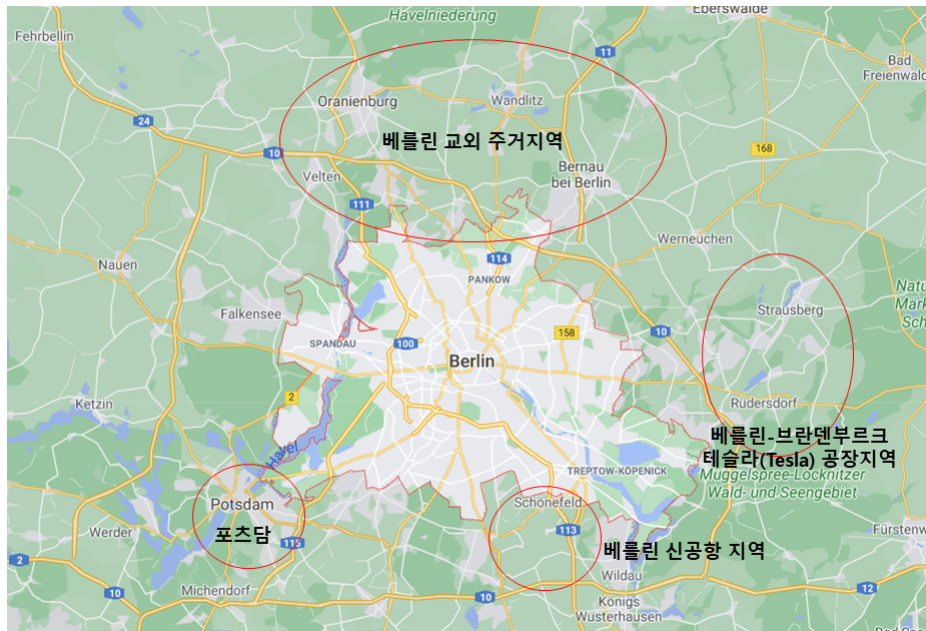
정책에 대한 비판과 연방하원의 월세상한제 폐지 결의

- 그러나 베를린의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의 방향과는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주택임대료는 안정을 찾는 듯했으나,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Brandenburg)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음

1) 주(州) 및 도시별로 최장 2025년 말까지 지역시세의 10%까지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있음

2) 베를린 시는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으로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의 강세가 지속되어 온 지역으로 진보성향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독일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브란덴부르크 주는 2015년 시행한 임대료제동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베를린의 월세상한제가 브란덴부르크의 주도(州都)인 포츠담(Potsdam)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신공항 인근지역, 테슬라(Tesla)사의 베를린 인근지역 신규공장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켜 이 지역들의 2020년 1년간 주택임대료가 20%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음



자료: Google Maps

| 그림 2 | 베를린의 행정구역 경계 및 인근 주거지역

- 또한, 법이 시행되고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2020년 5월 기민/기사당(CDU/CSU Union)-자민당(FDP) 연합 교섭단체에서 연방헌법재판소에 베를린의 독자적인 월세상한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음
- 소 제기 이후 자민당 교섭단체 대표 마르코 부쉬만(Marco Buschmann)은 “베를린의 월세상한제는 분명히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임대차법은 연방입법부의 문제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임대료를 지방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힘

연방헌법재판소의 월세상한제 폐지 결정

- 10개월간의 심리과정을 거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21년 3월 25일 베를린의 월세상한제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

- 현재는 아래와 같이 4월 15일 간략한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사실을 알렸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오늘 공표된 판결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상원은 베를린 주거 임대료 제한에 관한 법(MietenWoG Bln)이 기본법과 합치하지 않으며 무효로 선언한다.

자유 주택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거주공간에 대한 임대료 상승 규제는 경쟁적 입법 권한³⁾에 속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입법 권한을 최종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때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입법부가 민법 556조 내지 561조에 임대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법 배제효과에 따라 이에 대한 주정부 입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베를린 임대료 제한법 또한 민간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무효이다.**

출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15일 보도자료 배포 No. 28/2021

- 판결에서 현재는 연방의 우선적 입법권을 인정함으로써 “베를린만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결국 베를린 월세상한제는 무효로 판결되었고,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 인상하지 못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이에 따른 분쟁과 임차인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지방정부 단독의 실패한 정책인가?

-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베를린 인근 도시의 임대료 추가 상승으로 인해 베를린 시의 이 정책은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월세상한제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2021년 9월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와 연정구성 결과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추가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또한, 베를린 시에서는 월세상한제 이외에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베를린 시의원인 플로리안 슈미트(Florian Schmidt)는 선매권을 적용해 베를린의 사회보존지역의 고급 리모델링 주택이 매각되는 방지하였으며, 선매권이 적용된 주택은 독일 주택건설협회로 넘어가 투기가격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았음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조직된 시민 운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독일 주거 및 몰수(Deutsche Wohnen und Co. enteignen) 조직은 거대 부동산 그룹들이 소유한 24만여 주택

3) 일정한 사항에 대해 연방과 주가 서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상 연방의 우선적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번 판결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법 제도 성격이 그대로 나타남

의 사회화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상 몰수를 통한 사회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 입법 발의를 추진하여 '19년 6월에 77,000여 명의 입법청원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하였음

- 그 밖에도 다양한 조직들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 중이며, 이들은 서로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고 지역 정치와도 잘 연계되어 있어 주택 매각이나 임차인 퇴거를 저지할 만큼의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러한 연방차원이 아닌 다양한 지방정부의 입법과정과 조직된 시민운동이 베를린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장인성 통신원

(독일 아헨공과대학교)

drong85@naver.com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클린 스트리트 시스템(CleanStat)” - 스마트한 도시 위생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 수집 및 개방

배경

- Ron Galperin 도시 행정 감사원(City Controller)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로스앤젤레스 시(市)에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독성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도로 쓰레기양이 과거 대비 450%가량¹⁾ 증가하여 공공 위생과 주민들의 심미성을 해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는 단순히 공공 위생과 도시 경관에 해가 되었다면, 현재는 쓰레기 투기로 인한 오물과 악취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COVID-19의 확산에 따라 노숙자의 증가, 행정 처리의 지연, 제한적인 공무원 수 운용 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로 인해 더욱더 도로 쓰레기양이 증가하여 공공 위생이 악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 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COVID-19 확산 이후 쓰레기 무단 투기량이 폭증했고, 사회·경제적인 약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사회의 공공도로에 쓰레기가 집중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화두인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²⁾
- 현재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도시 위생 개선(예: 효율적인 도로 청소)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시(市)의 정책 이해관계자들 또한 공공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1) 2) 출처: Los Angeles Times (2021). “L.A.’s illegal dumping problem is worsening, controller’s report says”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1-03-24/los-angeles-illegal-dumping-report-galperin>)

개요

- 2016년 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지휘하에, 시(市) 위생 환경국(Los Angeles Sanitation and Environment, the Bureau of Sanitation: LASAN BOS)은 로스앤젤레스 시에 존재하는 모든 도로의 쓰레기양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화하도록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2015년 4월, 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행정 명령 8호(Executive Directive No. 8)에 의해 출범하였으며, 이를 the Clean Streets LA(CSLA)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음
 - CSLA 프로젝트를 통해 로스앤젤레스 시의 공공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 비영리단체와 민간 부문과도 협약을 맺어 민관합작 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로 계획되었음

클린 스트리트 시스템(CleanStat System)

- CSLA 프로젝트의 핵심은 “CleanStat”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인데, 이는 Block-level 수준으로 각 도로의 위생 상태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위생에 따라 세 단계로 도로 상태를 구분하였음(1=Clean(녹색), 2=Somewhat Clean(노란색), 3=Not Clean(빨간색))
 - 구분 방법은 평가원이 직접 시찰 후: 1) 쓰레기통 이외에 버려진 쓰레기양, 2) 대형 쓰레기, 3) 대마 (Weed), 그리고 4) 불법 쓰레기 투기량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분류함



출처: 로스앤젤레스 시(市) 위생환경국(Los Angeles Sanitation and Environment, the Bureau of Sanitation)
<https://geohub.lacity.org/datasets/4b62eb4528944af9ac1535817da965c4>

| 그림 1 | 도로의 위생상태 구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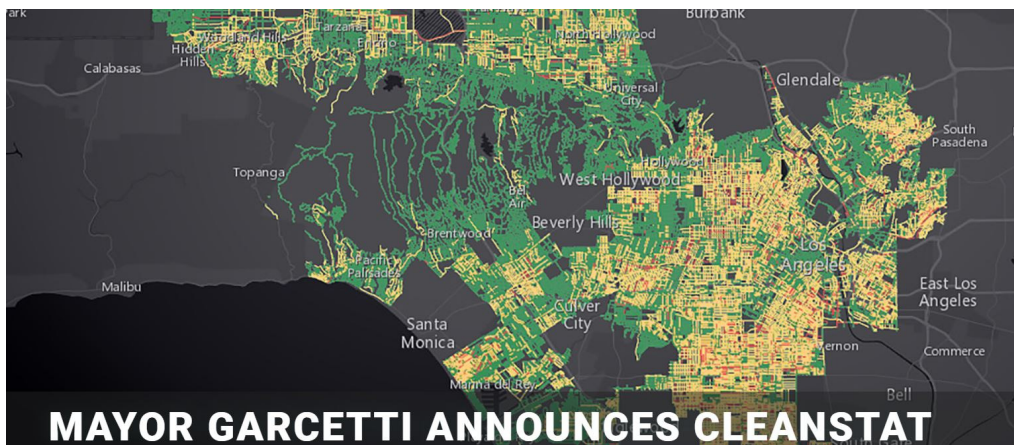
- CleanStat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LASAN의 5개의 조(1조당 2명의 인원)가 분기별로 각 도로를 비디오 촬영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도구를 이용하여 점검하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함(약 42,000 공공 거리를 GIS로 코딩함)

- 또한, LASAN은 매달 1회 미팅을 통해, 쓰레기양 관리와 도로 위생을 지키기 위한 개선점이나 현재 상황의 난관 등을 조별끼리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꾀하고 있음

* 여기서 다루어진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예: 쓰레기통의 배치 증가 혹은 배치 위치 선정 등)은 따로 리포트로 작성되어 쿼터별로 시 의회에 보고됨

- CleanStat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이자 정책적 목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레기통과 CCTV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등, 공공 위생 증진을 위한 정책 전달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있음³⁾

* 더 나아가, 거주 지역에 따라 영향을 달리 받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며, 바이든 정부의 기조인 환경적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과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이루는 것에 교두보로 활용될 예정임⁴⁾



출처: 로스앤젤레스 시(市) 시장실(Los Angeles Mayor's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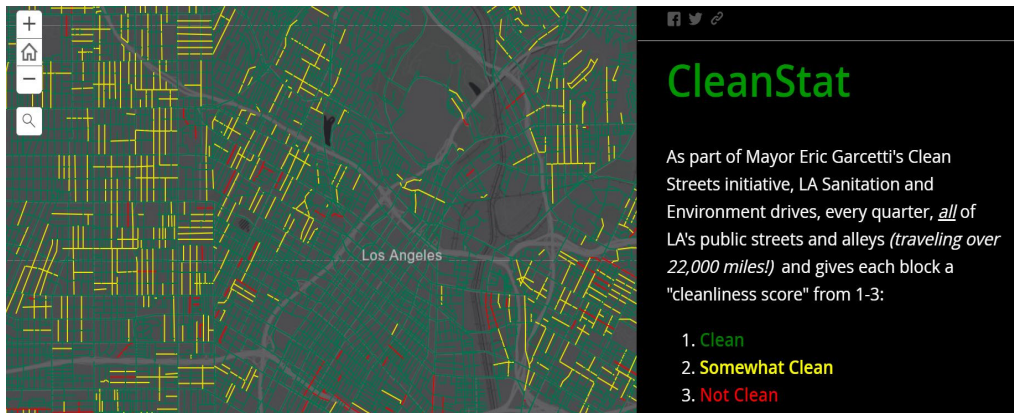
<https://www.lamayor.org/mayor-garcetti-announces-cleanstat-0>

| 그림 2 | CleanStat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예시

3) 출처: Businesswire (2016). "City of Los Angeles to Tap into CENIC's CalREN, California's High-Speed Research Internet Backbone"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60512006653/en/City-of-Los-Angeles-to-Tap-into-CENIC%E2%80%99s-CalREN-California's-High-Speed-Research-Internet-Backbone>

4) 출처: 3)과 동일



출처: 로스앤젤레스 시(市) 위생환경국(Los Angeles Sanitation and Environment, the Bureau of Sanitation)
<https://geohub.lacity.org/datasets/4b62eb4528944af9ac1535817da965c4>

■ 그림 3 ■ GeoHub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 사용자 친화적 플랫폼

프로젝트의 실행과 긍정적 결과

- 프로젝트 시작 후 1년간, 데이터를 시각화한 지도를 통해 선발 대응(Proactive)과 균형적 접근(Equitably) 통해 “Not Clean(상기 지도에서의 빨간색)” 상태를 82% 감소시켰음⁵⁾
- 무엇보다도 미국의 도시, 특히 로스앤젤레스라는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공도로에 대한 위생의 평가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다른 주에 있는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선례로 기록됨(Ladin, 2017)
 - 또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증진되는 등 정책 전달과 투명성에 관해 개선된 부가적인 효과도 존재하여, 시민들이 정책 모니터링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간 정책으로 인정받음(Ladin, 2017)

프로젝트의 업적과 한계점

- 로스앤젤레스 시(市)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는 시스템과 수집하는 데이터인 만큼 새로운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지만,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함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인 만큼 Drexel University 경영 대학원과 CIO.com이 주관하는 사회적 혁신 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leanStat 시스템이 수상하였음⁶⁾

5) 출처: 로스앤젤레스 시장 공보실

(<https://www.lamayor.org/mayor-garcetti-announces-cleanstat-0>)

6) 이 상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 정책을 대상으로 수상함.

출처: <https://www.recyclingtoday.com/article/la-program-wins-award/>

- 하지만 COVID-19가 확산된 뒤로, 도로 위생 정비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이 이동식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로 전환되었고, CleanStat의 데이터는 쓰레기 투기에 관련되어 사용되기보다는 어떤 위치에 얼마나 이동식 세면대와 손 세정제가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관련하여 사용됨
- * 물론 CleanStat에 미리 존재하였기에 필요한 위치에 적절하게 300개의 이동식 세면대와 170 이상의 이동식 화장실⁷⁾이 배치될 수 있었음

프로젝트의 미래

- LASAN의 계획에 따르면 COVID-19의 확산이 줄어들 때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공공도로 위생 관리를 위한 CleanStat의 활용은 잠정적으로 연기되고, COVID-19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배치(예: 이동식 세면대, 이동식 화장실, 손 세정제 등)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발표함(City of Los Angeles, 2020)
- 이러한 예산과 자원 배치는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정책 지원에 있어 불평등한 배분이 없도록 진행될 예정임(City of Los Angeles, 2020)
- 로스앤젤레스 시장 Eric Garcetti는 2019년 후반기에 잠시 진행되었던 CleanStat 2.0을 COVID-19가 해결된 이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발표함⁸⁾

참고문헌

- City of Los Angeles (2020, April). INTER-DEPARTMENTAL CORRESPONDENCE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147-S21_rpt_BOS_04-24-2020.pdf
- Ladin Sari. (2017, March 17). Turning Dirty Streets Clean through Comprehensive Open Data Mapping *CIVIC ANALYTICS NETWORK*. Retrieved from: <https://www.govtech.com/data/Turning-Dirty-Streets-Clean-through-Comprehensive-Open-Data-Mapping.html>

7) 6)과 동일

8) 출처: 로스앤젤레스 시장 공보실 (<https://www.lamayor.org/improving-government>)

Eli Keunyoung Lee (이근영) 통신원

PhD Student,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